

블랙박스로 선박 안전 지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많은 국민이 선박 안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국제항해 여객선은 블랙박스라고 알려진 항해자료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했으나, 국내(연안) 항해 여객선의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돼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 발생 시 객관적 증거에 따른 정확한 원인규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항해안전을 강화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이제 연안 여객선도 의무적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합니다. 항해자료기록장치는 선박 속력, 운항경로, 통신내용 등을 기록하므로, 만일의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시의 운항 상황을 정확히 재현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모든 상황을 기록하니, 선박 종사자들은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 해양사고 원인 규명 및 선원의 성실 근무와 비상시 적정 대처를 유도

연안 여객선 총 173척('13.12월 기준) 중 21척이 2015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선박별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부터 선박용 블랙박스를 설치



개선 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에 블랙박스(항해자료기록장치) 설치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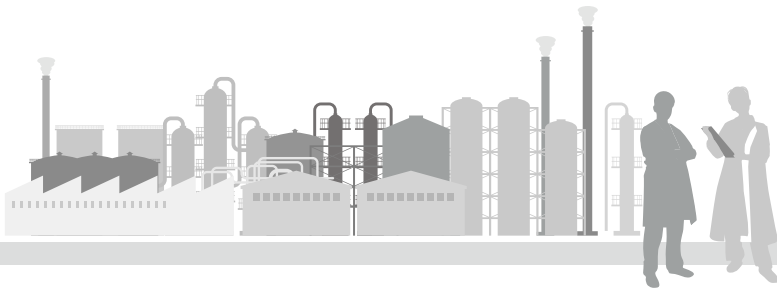
개선 후

연안여객선에도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현존선) 500톤 이상 연안여객선
(신조선 또는 중고수입선) 300톤 이상 연안여객선
'선박설비기준' 개정 (해수부, '14.9월)

안전한 대한민국은 기본, 늘어나는 일자리는 덤으로~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법 개정에 맞춰 빠른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설투자 등 사전준비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이죠.” 화학물질 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중소기업 대표 M씨는 걱정이 컸습니다.

이제 M씨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화학안전과 관련된 각 부처와 유관기관이 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노후 시설 개보수를 위한 투자비용을 지원받고, 방문 컨설팅을 받으며 더욱 안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설비 투자 활성화로 비용편익 발생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17년까지 안전설비 투자펀드 5조원 지원 예정



개선 전

2015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

개선 후

정부합동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이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

* 노후시설 개보수 용자·보조 사업, 화학물질시설 투자비용 지원, 중소기업체 방문교육·컨설팅, 집중기술지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환경부, '15.1월 시행)

원전의 안전 책임감이 커졌어요!

가까운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O씨의 마음 한 구석엔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혹여 한국에서도 원전 피해가 발생하면 과연 빠르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O씨는 궁금합니다.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부지 당 10배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5개 원전 부지가 각각 5,000억 원씩 모두 2조5,000억 원에 이르는 원자력손해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원자력 손해보험 의무 가입 총액이 높아지면서 원전 피해 보상을 위한 재원이 더욱 넉넉히 확보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원전사업자의 재정적 담보 능력 확보로 원자력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가능



개선 전

발전용원자로 사업자의 배상조치액*을 500억원으로 규정

* 배상조치액 :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금액,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 공탁금액

개선 후

발전용원자로 사업자의 배상조치액을 5,000억원으로 올려서 원전 피해 보상을 위한 자원 확대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 (원안위, '14.12월)